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변 호	20504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유용원 · 김용태 · 성일종
김성원 · 우재준 · 이달희
김상훈 · 조배숙 · 배현진
고동진 · 임종득 · 김예지
윤상현 · 안상훈 · 박수영
박대출 · 김소희 · 이종욱
한기호 · 유영하 · 박충권
이진숙 · 박정하 · 최형두
한동훈 · 이양수 · 김석기
정연욱 · 정성국 · 김정재
천하람 · 김도읍 · 김 건
박정훈 · 강대식 · 김기현
서지영 · 김대식 · 이인선
이주영 · 김태규 · 이준석
의원(4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육군사관학교의 책임을 언급하며 각 군 사관

학교의 조속한 통합을 촉구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한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서, 사관학교의 통폐합은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연좌제적 인식이자, 그동안 정부가 사관학교 통폐합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600여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기간 등에 관한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개한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생도와 장교단, 사관학교 동문, 국방·안보·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합동교육과 첨단 군사교육 등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함.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교육

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600여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그 유가족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임.

정부는 이에 앞서 7월 16일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위상 하락 등으로 미래세대의 사관학교 진학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장교 양성체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첨단 무기의 발전 등으로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추진의 주된 근거로 제시함.

그러나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사관학교 지원을 제고 등 미래세대의 진학 유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합동성 강화 역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의 강화와 합동교리 발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육군·해군·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영역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각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각 군 사관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오랜 기간 각 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하여 왔음. 이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더욱이 육군사관학교가 자리한 서울 태릉,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청주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교육철학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이자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서도 사관학교 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문화와 교육환경 상실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기간 등 정책 추진의 핵심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정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통합사관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나아가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조직을 준비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전 자운대를 이전 대상으로 발표한 이후에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사관학교의 장교 양성체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 따라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 검증,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합동교육과 첨단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